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2017년 국내 10대 트렌드

목 차

■ 2017년 국내 10대 트렌드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2017년 국내 10대 트렌드의 주요 내용	2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관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경 제 연 구 실 : 홍준표 연 구 위 원 외(2072-6214, jphong@hri.co.kr)

Executive Summary

□ 2017년 국내 10대 트렌드

① 폴리코노미(Poli-conomy)

대선이 있는 2017년에는 표심 확보를 위한 정치 논쟁이 경제 현안을 압도하면서 각 정당의 경제 공약이 선거 승리에 중점을 둔 내용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강해지는 '폴리코노미'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 정체성이 확연히 나타나지 않는 모호한 경제 정책이 더 많이 제시되고, 선심성 공약이 환영받을 것이다. 한편,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약 준비가 미비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경제 공약이 요구되고 검증 절차 또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② 북핵 3D 해법 모색 난항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둘러싸고 한·미·일 對 북·중·러 대립 구도가 형성되면서 북핵 3D(Deterrence · Defence · Denuclearization-억지 · 방위 · 비핵화) 해법 모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북한은 국제사회의 對北 제재 압박 및 남북 경협 중단에 대응하기 위해 북중 경협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미국과 중국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보와 자국의 이익 보호를 위해 정치·경제적 측면에서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일의 '先 비핵화, 後 평화협정 논의' 對 중국의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논의' 정책 기조 간 대립이 지속될 전망이다. 북핵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해서는 미중간 전략적 균형외교를 통한 비핵화 노력과 함께 대화를 활용한 문제 해결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③ 한국 경제, New Neutral 진입

2017년 한국 경제는 뚜렷한 성장 모멘텀을 찾지 못하면서 실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뉴 뉴트럴(New Neutral) 상태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 뉴트럴이란 저금리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실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중립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가계의 소득 개선이 미흡한 가운데 급증한 가계부채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악화 등으로 민간소비 회복이 부진하며 경기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설비투자 역시 기업 구조조정 및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개선세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최근 국내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건설 경기가 공급 과잉 및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등으로 2017년에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 경제의 저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황 국면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기 진작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④ 에이지-퀘이크(Age-quake)

한국은 2017년에 인구감소와 고령사회의 충격이 경제 전반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에이지-퀘이크에 진입할 것이 예상된다. 에이지 퀘이크는 첫째, 국내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가계의 소비 및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셋째, 가계의 소비구조 변화, 정부 재정수지 악화, 노동생산성 하락 등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넷째, 가계의 소득분배구조 역시 악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고용 확대 및 재정수지 부담 완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⑤ 창조경제, 그 이후는?

2017년 한국사회가 정권교체기에 진입함에 따라 현 정부의 『창조경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원천에 대한 모색과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성장원천의 모색은 글로벌 환경 변화와 한국경제 고유의 특성이 모두 반영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념과 세대간 인식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치중립적이고 미래지향성을 가지는 성장원천을 모색하려는 움직임도 전망된다. 특히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불황 탈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주력 산업이 제시될 수 있는 논의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장원천이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현재 한국사회 전반의 시각을 담아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장원천'을 모색하는 과정이 과거와 같은 폐쇄성에서 벗어나 개방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⑥ 안전경제의 부상

잇단 재난·사고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경제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정부가 국가안전체계 개선을 주도하는 가운데 기업들도 안전 관련 투자를 확대하면서 국가·기업 안전 시스템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안전산업의 성장이 예상되면서 정부의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안전 제품·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안전 관련 제품·서비스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안전 R&D 확대 및 인프라 정비로 국가안전체계의 선진화를 주도하는 한편 기업은 국민·소비자 안전 보호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안전 관련 투자 확대에 나서야 한다.

⑦ 매니지먼트 시프트 : 'm'(제조)에서 'c'(소비)로

2017년, 제조업체는 부진한 주력 제품의 수익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품의 제조 판매보다는 고객 소비를 자극하는 서비스 개발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전통적

인 제조업 영역인 제조 판매는 기술 평준화와 경쟁 심화로 점점 저수익화, 성숙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IoT(사물인터넷) 기능을 지닌 제품이 되면서 판매 후에도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익 창출 기회가 더욱 많아지고 있다. 첫째, 고객의 제품 구매와 활용 니즈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제품과 서비스를 묶은 솔루션 개발이 늘어난다. 둘째, 빅데이터, AI 등 ICT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서비스 중심 제조 모델'로 변신하는 추세가 더욱 확산될 것이다. 셋째, 주력 제품의 IoT화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한 제휴, M&A 등이 치열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⑧ 불황형 소비(CORE) 확산

저성장 지속 및 소득성장 정체로 인해 비용 절약과 만족의 최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불황형 소비행태(CORE)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특징으로는 첫째, 소형화(Compact)로 소형 제품에 대한 선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소비자간 협동(Organized)으로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정보공유를 위한 소비자간 협동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지출 감축(Reducing)으로 소비 지출을 감축하기 위한 소비행태가 확산될 전망이다. 넷째, 경제성(Economical)으로 상품의 핵심적 가치 및 경제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⑨ 에듀 버블

과도한 교육투자가 지속되는 반면, 경제는 저성장 국면에 머무르면서 과잉 교육투자에 대한 우려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노동시장에서 대졸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경제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력이 약화되면서 대졸 이상의 실업자 증가가 예상된다. 둘째, 교육투자가 증가하면서 교육투자 수익률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2017년 이후에는 대학정원이 입학희망자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등교육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에듀 버블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등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⑩ 빅 아이 스몰 위(Big "I" Small "We") 사회

정치적 불확실성, 저성장, 소통창구 부재 등으로 인해 이기주의 심화(Big "I")와 공동체 의식 약화(Small "We") 현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고용시장의 위축과 정권교체기의 불확실성 속에서 세대 간 갈등 문제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취약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속과 성과연봉제 실시로 인해 노사 갈등 문제가 확산될 전망이다. 셋째, 국방 및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쟁점들이 사회적 갈등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갈등 문제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사회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1. 개요

-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주요 국내외 미래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2017년 국내 정치·외교·통일, 경제, 산업·경영, 문화 등의 분야에서 새롭게 주목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10대 트렌드를 선정함
 - 정치·외교·통일부문을에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렌드로는 ‘폴리코노미 (Poli-conomy)’와 ‘북핵 3D 해법 모색 난항’이 선정됨
 - 경제 부문에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렌드로는 ‘한국 경제, New Neutral 진입’, ‘에이지-퀘이크(Age-quake)’, ‘창조경제, 그 이후는?’ 등 3개가 선정됨
 - 산업·경영 부문에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렌드로는 ‘안전경제의 부상’, ‘매니지먼트 시프트 : ‘m’(제조)에서 ‘c’(소비)로’가 선정됨
 - 문화 부문에서 ‘불황형 소비(CORE) 확산’, ‘에듀 버블’, ‘빅 아이 스몰 위 (Big "I" Small "We") 사회’가 트렌드로 선정됨

< 2017년 국내 10대 트렌드 >

분야	주제
정치·외교·통일	1. 폴리코노미(Poli-conomy)
	2. 북핵 3D 해법 모색 난항
경제	3. 한국 경제, New Neutral 진입
	4. 에이지-퀘이크(Age-quake)
	5. 창조경제, 그 이후는?
산업·경영	6. 안전경제의 부상
	7. 매니지먼트 시프트 : ‘m’(제조)에서 ‘c’(소비)로
문화	8. 불황형 소비(CORE) 확산
	9. 에듀 버블
	10. 빅 아이 스몰 위(Big "I" Small "We") 사회

2. 2017년 국내 10대 트렌드의 주요 내용

① 폴리코노미 (Poli-conomy)

- (의미) 대선이 있는 2017년에는 표심 확보를 위한 정치적인 논쟁이 경제 성장, 민생 안정, 복지 증진 등 경제 현안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
 - ‘폴리코노미(Poli-conomy)’는 대선을 앞두고 제시되는 경제 공약이 선거 승리에 중점을 둔 내용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강해지는 현상을 의미
- (내용)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간의 유사한 주장 및 선심성 공약이 주로 제기되는 한편, 공약의 검증 강화 주장도 확산 예상
 - **모호한 경제 공약** : 대선을 앞두고 정당 정체성이 뚜렷한 경제 공약보다 선거용 표심 확보를 위한 모호한 경제 정책이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 2007년 대선에서는 성장과 분배에 대한 입장 차이가 비교적 존재했었음
 - 2012년 대선에서는 경제민주화 이슈가 모든 경제 부문 공약 논의를 흡수
 -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공정사회와 상생경제’를,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성장론’을, 국민의당은 ‘공정성장론’을 경제 공약의 핵심 키워드로 내세워 사실상 주요 정당간의 경제 정책이 유사하였음

< 과거 주요 대선 후보 경제 공약 >

시기	후보	경제 부문 주요 공약
2007년 대선	정동영	- 첨단기업 육성 - 대륙경제 개발 - 중산층 복원
	이명박	- 연7% 성장 - 10년 이내 소득 4만 달러 - 10년 이내 세계7대 강국 실현
2012년 대선	박근혜	- 경제민주화 - 맞춤형 복지 - 일자리 창출
	문재인	- 경제민주화 - 소득주도성장 - 60만개 일자리 창출

자료 : 주요언론보도 종합.

< 경기선행지수 및 제조업, 소비자 경기전망지수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제조업업황전망BSI는 계절조정, 경기선행지수는 순환변동치 기준.

- **선심성 공약** : 지표로 나타나는 경기보다 체감 경기가 더 부진하여 민생 안정 부문에 대한 선심성 공약이 환영받을 것으로 예상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경기선행지수는 기준점 100p를 넘어서며 상승하고 있어 지표로 나타나는 향후 경기 전망은 양호
 - 그러나 제조업 업황전망BSI 및 소비자 향후경기전망CSI는 하락하고 있어 기업 및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에는 향후 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

- **실현 가능성 검증 강화** : 또한, 대선 기간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 정당에 공약 준비가 미비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경제 공약의 실현 가능성 검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예상되면서 대선은 기존에 예정되었던 12월보다 더 이른 시점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됨
 - 각 후보자의 경제 공약이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7년 대선에서는 공약이 내거는 목표보다, 공약 이행 방법에 대한 검증이 상대적으로 강해질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저하된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한 미래 지향적이면서도 정책의 지속성이 확보된 경제 공약을 준비하고 공약 평가 성숙화를 위해 노력

- **정치적 혼란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저하된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미래 지향적인 공약 마련이 절실**
 - 경제 현상에는 '자기 실현적 기대(self-fulfilling expectation)'가 어느 정도 있는 만큼,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는 지금은 미래 지향적인 경제 공약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

- **경제 정책 지속성도 고려되어야 하며 공약 평가 성숙화를 위해 노력**
 - 우리나라가 '빈곤 극복'에는 성공하였지만 '풍요 조절'에 성공하지 못해 아직도 중산층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삶의 질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성이 확보된 정책이 필요하며, 정책의 꾸준한 집행 및 평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

홍준표 연구위원(jphong@hri.co.kr 2072-6214)

② 북핵 3D 해법 모색 난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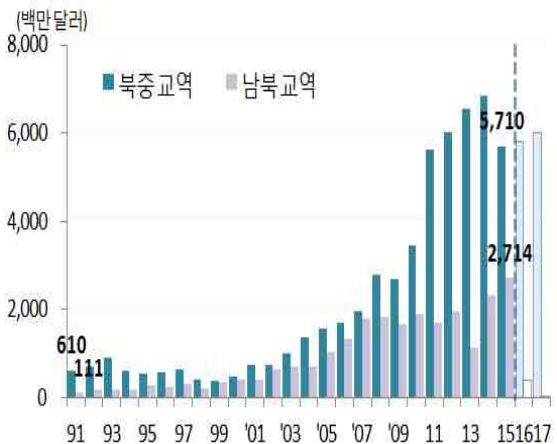
- (의미)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둘러싸고 한·미·일 對 북·중·러 대립 구도가 형성되면서 북핵 3D(Deterrence · Defence · Denuclearization-억지 · 방위 · 비핵화) 해법 모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한·미·일 남방 3국과 북·중·러 북방 3국의 대립 구도 강화 전망
 - 중국은 적극적인 대북 제재·압박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최근 한·미 군 당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발표(7.8)에 중·러가 즉각 반발하면서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구도 가속화 우려
- (내용) 2017년에도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북핵 문제의 교착 및 미중간 갈등 심화 등으로 '한반도 新냉전 구도'가 고착화될 우려
 - 북중 경협 강화 : 북한은 국제사회의 對北 제재 압박 및 남북 경협 중단에 대응하기 위해 북중 경협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
 - 북중 교역은 2015년 57.1억 달러로 전체 교역 대비 63.7%를 차지, 2009년 이후 50% 이상의 높은 비중 유지('09년 52.6% → '13년 77.2% → '15년 63.7%)
 - 지난 10월 북중 국경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한 류전민 中 외교부 부부장 방북을 계기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중 경협이 활발해질 가능성도 존재

< 북한의 대외 교역액과 대중 의존도 >



자료 : KOTRA 통계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남북 교역액 포함.

< 남북 및 북중 교역액 추이 >



자료 : KOTRA 통계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1)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남북 교역은 중단.
2) 2016년, 2017년 교역액은 추정치.

- **미중 갈등 심화** : 미국과 중국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보와 자국의 이익 보호를 위해 정치·경제적 측면에서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군사적으로 미국은 사드 배치 등 한국, 일본과 미사일방어체계(MD)를 강화할 것이며, 중국도 러시아와 합동군사훈련 등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할 것임
 - 경제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저성장 문제에 직면한 자국 경제 상황과 맞물려 양국간 통상 마찰과 환율 분쟁이 2017년에는 더욱 격화될 우려가 존재
 - 특히, 한국은 미국에게 對中 정책의 교두보로, 북한은 중국에게 對美 완충지대로 인식되고 있어 미중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가치는 매우 높음

- **북핵 해법 대립** : 북핵 관련 한·미·일의 '先비핵화, 後 평화협정 논의' 對 중국의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논의' 정책 기조 간 대립이 지속될 전망
 - 한·미·일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고 對北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3국 공조를 강화할 전망
 - 중국은 지난 1월 4차 핵실험 이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병행 추진'을 강조하고 있고, 북한도 '先 핵보유국 인정, 後 평화협정 논의'를 지속 주장할 것으로 예상
 - 다만, 한미 일각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을 위한 對北 대화론도 제기되고 있어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음

- (시사점) 미중간 전략적 균형외교를 통한 비핵화 노력과 함께 대화를 활용한 문제 해결 노력도 병행 필요
 -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중간 균형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
 - 미국의 트럼프 차기 행정부와 중국의 시진핑 2기 정부와의 전략적 균형외교를 통한 북핵 해법 모색이 필요
 - 특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양자 또는 다자 대화를 통한 긴장 해소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이해정 연구위원(hjlee@hri.co.kr 2072-6226)

③ 한국 경제, New Neutral 진입

○ (의미) 한국 경제가 뚜렷한 성장 모멘텀을 찾지 못하면서 실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뉴 뉴트럴(New Neutral) 상태에 진입할 전망

- 뉴 뉴트럴(New Neutral)¹⁾이란 저금리 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실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중립적인 상태를 의미

· 뉴 뉴트럴 상태에서는 역대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채 수준은 높은 상황이 나타남

- 2017년 한국 경제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저성장세 지속,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등 뉴 뉴트럴 시대의 특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의 2017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3%로 국내 경제의 저성장세가 지속되며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전망²⁾

· 또한 국내 가계부채 역시 2017년말 1,4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³⁾

< 국내 경제성장률 및 기준금리 추이 > < 소비자심리지수 및 설비투자전망 지수 >



자료 :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16~2017년 경제성장률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
주 : 설비투자전망은 제조업 기준.

- 1) 뉴 뉴트럴(New Neutral)이란 2014년 PIMCO가 ‘뉴 노멀’의 진화된 버전으로 제시한 개념. 금융위기 이후 ‘뉴 노멀’ 상태에서는 신흥국과 선진국간 성장 속도의 양분화가 나타났으나 ‘뉴 뉴트럴’ 상태에서는 저성장으로 수렴 현상이 발생. 특히 중앙은행의 제로금리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이 경제성장을 이끌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뉴 노멀’보다 비관적인 상황이나 상대적으로 경기 하방 위험도 줄어들어 침체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성장도 이루어 지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
- 2)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기준금리 또한 인상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 경기의 부진한 회복세를 감안시 인상되더라도 매우 완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저금리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3) 현대경제연구원(2016년 10월), “국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및 전망”, 현안과 과제 16-4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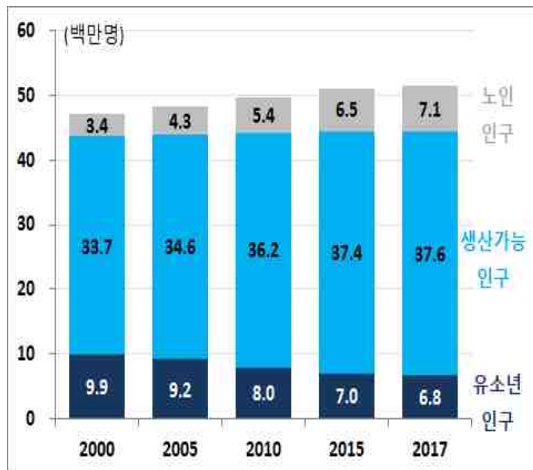
- (내용) 소비 절벽 우려, 설비투자 개선 미흡, 건설 경기 둔화 등 한국 경제의 뚜렷한 성장 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전망
 - 소비 절벽 우려 : 소득 개선 미흡, 가계부채 문제,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민간소비가 경기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
 - 가계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급증한 가계부채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며 소비 개선을 제약할 전망
 - 기업 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른 고용 여건 악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위축된 소비 심리 역시 민간소비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설비투자 개선 미흡 : 기업 구조조정 및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 심리 악화 등으로 설비투자 역시 개선세가 미흡할 전망
 - 글로벌 경기 개선,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설비투자가 회복세로 반등할 전망이나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
 - 국내 정치 불안정성 확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업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점 역시 설비투자 회복을 제약할 전망
 - 건설 경기 둔화 : 최근 국내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건설 경기가 공급 과잉 및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으로 2017년에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
 - 2015년부터 주택 시장 호황이 지속되며 2016년 3분기 경제성장률 2.6%(전년 동기대비 기준) 중 건설투자의 기여도가 1.7%p에 달하는 등 건설경기가 국내 경제성장을 견인
 - 그러나 최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등 공급과잉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이 가계부채 대책이 강화되면서 2017년에는 건설 경기가 둔화될 전망
- (시사점) 불황 국면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기 진작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회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

조규립 연구위원(jogyurim@hri.co.kr 2072-6240)

④ 에이지-퀘이크(Age-quak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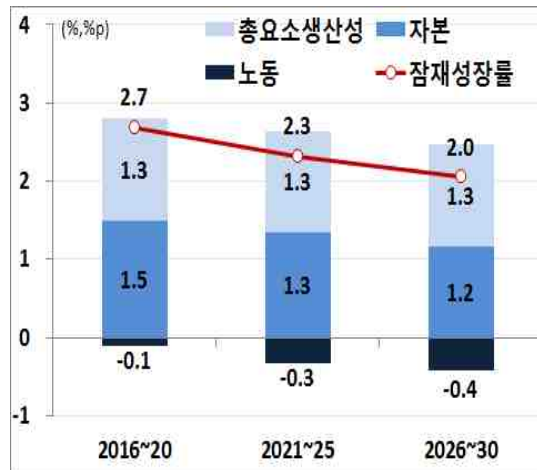
- (의미) 한국은 2017년에 생산인구감소와 고령사회의 충격이 경제 전반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에이지-퀘이크4)에 진입
 -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에 약 3,763만 명을 정점으로 2017년 3,762만 명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
 - 한국은 2017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13.8%로 고령사회5) 목전에 와 있으며 노인 인구(65세 이상)가 처음으로 유소년 인구(0~14세)를 앞지름
- (내용) 인구구조의 변화로 국내 잠재성장률 하락, 소비 및 투자 위축, 소비구조 변화, 재정수지 악화, 소득불평등의 심화 등이 예상
 - 잠재성장률 하락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인구구조의 고령화 등은 국내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현재 국내 잠재성장률은 2.7% 수준으로 추정6)되며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노동의 성장 기여도를 점차 낮출 것으로 예상

< 연령별 인구 추이 >



자료 : 통계청.
 주 : 유소년인구(0~14세), 생산가능인구(15~64세), 노인인구(65세 이상).

< 잠재성장률 전망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

4) '에이지-퀘이크'란 영국의 작가이자 인구문제 전문가인 폴 윌리스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충격을 지진에 빗대 표현임.
 5)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이상, 고령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이상, 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사회를 각각 의미함.
 6) 현대경제연구원(2016년 1월), "국내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 경제주평 16-03호.

- **소비 및 투자 위축** : 인구구조 변화는 가계의 소비 및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
 - 고령화가 지속되면 가계는 자신이 미래에 생존할 기간이 늘어난 것을 인식하고 현재 소비를 줄이고 미래 노후를 위해 저축을 늘릴 전망
 -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총저축률 하락, 노동자의 고령화로 인한 임금상승 효과 등은 기업의 부담을 늘려 기업들이 R&D나 신규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워질 전망
 - **소비구조 변화 및 재정수지 악화** : 인구구조 변화로 가계의 소비구조 변화, 정부 재정수지 악화, 노동생산성 하락 등이 나타날 전망
 - 고령층의 소비 비중이 높은 주택, 에너지, 보건, 식료품 관련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교육, 오락·문화, 의류·신발 등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전망⁷⁾
 - 고령화 진전에 따라 세원이 되는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연금, 각종 사회 보장 및 의료비 지출이 늘어 정부 재정수지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노동경제학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은 연령을 40세 초반으로 보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인력이 지나치게 고령화되면 노동생산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임
 - **소득분배구조 악화** :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는 가계의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킬 것으로 예측
 - 가구주 연령이 40세 이후가 되면 가구소득의 불평등도가 증가하는데, 이는 평균적으로 고령층일수록 가구주 취업가구와 미취업 가구 간의 소득격차가 크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득격차의 폭이 더욱 상승하기 때문⁸⁾
 -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 상 이러한 효과는 더욱 커질 가능성
- (시사점) 저출산·고령사회 위험에 대비해 생산성 향상, 고용 확대 및 재정수지 부담 완화 등의 대책이 필요
- 저출산·고령사회 위험에 대비하여 노동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고령·여성층의 노동참가 촉진과 출산율을 제고하고 인적자본의 고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노력이 필요

김천구 연구위원(ck1009@hri.co.kr 2072-6211)

7) 현대경제연구원(2014년 12월), “2020년 인구 효과에 따른 소비구조 전망”, VIP 리포트 14-45호.

8) 홍석철(2013년 4월),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의 심화”. 「한국경제의 분석」 제19권 제1호.

⑤ 창조경제, 그 이후는?

- (의미) 2017년 한국사회가 정권교체기에 진입함에 따라 각계각층에서 현 정부의 『창조경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원천에 대한 모색과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
- 2017년은 정당, 학계, 사회단체, 언론 등에서 현정부의 『창조경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성장원천(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성장원천은 경제성장을 이루는 근본적인 힘을 의미하며 과거 정부들마다 출범 초기에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성장원천을 제시한 바 있음
 - 예로는 『신경제 (김영삼 정부)』, 『지식기반경제 (김대중 정부)』, 『혁신주도형경제 (노무현 정부)』, 『녹색경제 (이명박 정부)』, 『창조경제 (박근혜 정부)』 등을 들 수 있음
- 이는 정권교체기를 맞아 가장 시급한 경제현안인 불황 장기화와 경쟁력 추락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비전과 대응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급증할 것이기 때문임

< 역대 정부의 성장원천 >

정부	성장원천	배 경	관련 정책
김영삼 정부	신경제	· 한국 대외개방 확대 · 세계화 확산	· 신경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92~'97) · G7 프로젝트 추진 사업('92~'01)
김대중 정부	지식기반경제	· ICT 기술 발전 · 생산성 논쟁	· 창조적 지식국가의 구축(장기발전비전) · IT 벤처 육성 정책
노무현 정부	혁신주도형경제	· 요소투입성장 한계 봉착 · IT 이후 성장동력 부재	·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사업('03~'07)
이명박 정부	녹색경제	· 고유가 · 환경·에너지 산업 부상	·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 4대강 사업, 자원외교, 원전수출 등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 글로벌 저성장 고착 · 신흥공업국의 빠른 추격	·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

자료 : 자체 정리.

9) '성장원천'은 정부 경제정책 기조의 최상위 개념으로 '성장방법'이나 '성장목표'와는 구별됨. '성장원천'은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성 수립의 암묵적인 기준이 되며 이에 따라 국가의 자원배분 구조에도 영향을 미침. '성장방법'은 상충되는 개념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것이며, '성장목표'는 성장원천과 성장방법으로 나아갈 경우 예상되는 미래의 경제사회상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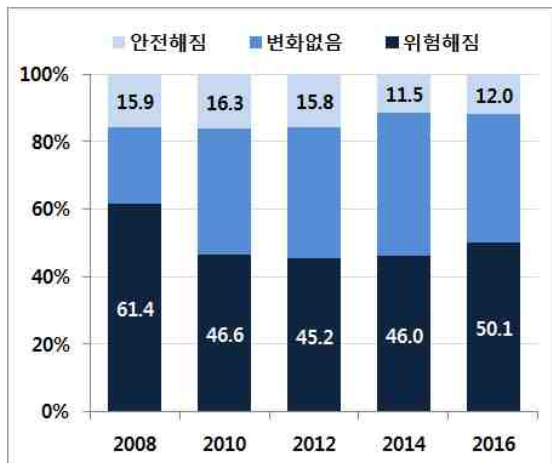
- (내용) 향후 모색되는 성장원천은 ‘한국적’이거나 ‘미래지향적’이거나 ‘구체적’인 성격을 가질 것으로 전망
 - 한국적 성장원천 : 향후 성장원천의 모색은 글로벌 환경 변화와 한국경제 고유의 특성이 모두 반영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
 - 과거 정부들의 성장원천들이 글로벌 환경 변화가 중시되어 해외 기관, 유명 학자들이 만들어 낸 ‘신조어’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았음
 - 그러나 최근 국내 문제점들이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시각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경제만이 필요로 하는 성장원천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전망됨
 - 가치중립적 성장원천 : 이념과 세대간 인식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치중립적이고 미래지향성을 가지는 성장원천을 모색하려는 움직임도 전망
 -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의 패러다임을 넘어서 가치중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성장원천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구체적 성장원천 :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불황 탈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 주력 산업이 제시될 수 있는 논의도 예상
 - 과거 지식기반경제(IT), 녹색경제(ET) 등과 같이 구체적인 성장동력을 제시할 수 있는 키워드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전망됨
 - 다만 현재 ‘4차 산업혁명’ 정도 이외에는 다수가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없기 때문에 성장원천이 구체성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시사점) 성장원천이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현재 한국사회 전반의 시각을 담아내고 미래에 희망이 제시될 수 있는 모색의 과정이 필요함
 - ‘성장원천’은 새정부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미래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한 의미없는 ‘조어(造語)’로 치부할 수 없음
 - 따라서 ‘성장원천’이 다양한 계층의 시각이 반영되어 통합적 가치를 가지고 다수의 공감대 형성될 수 있도록, ‘성장원천’을 모색하는 과정이 폐쇄적이 아닌 개방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주 원 이사대우(juwon@hri.co.kr 2072-6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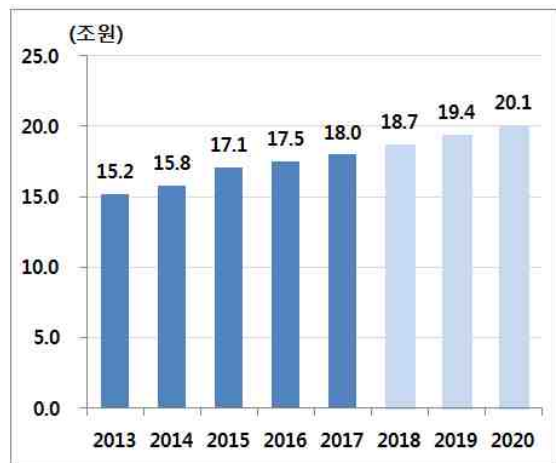
⑥ 안전경제의 부상

- (개요) 잇단 재난·사고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경제의 중요성이 높아질 전망
 - 개념 : 국민·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인 위기 대응체계 마련 및 안전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안전 중심의 경제·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전망
 - 재난재해, 산업활동 등으로 인한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진단, 대응하여 인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경제·사회 시스템 마련이 가속화될 것
 - 나아가 이를 새로운 성장동력의 마련 계기로 활용(예시: 정부의 국가안전 분야 R&D 확대, 기업의 안전성 강화 제품 개발 활성화 등)
 - 배경 : 해마다 되풀이되는 재난재해, 사건·사고로 인해 사회 안전 시스템에 대한 국민 수요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
 - 강남역 문지마 살인사건(16.5), 가슴기 살균제 피해 논란 재점화(16.5), 봉평 터널 교통사고(16.7), 태풍 차바(16.10), 경주 지진(16.10) 등 사건·사고로 국민 불안이 고조
 - 실제 통계청의 「2016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5년전과 비교하여 사회가 더 위험해졌다고 응답한 비중이 2016년 50.1%를 기록(14년대비 4.1%p 증가)
- (내용) 안전경제의 부상으로 국가·기업의 안전 시스템의 강화, 안전산업 성장 및 지원 확대, 안전 관련 제품·서비스 시장 확대 등이 전망

< 국민이 느끼는 사회의 안전상태 변화 (5년전과 비교) > < 정부의 공공질서·안전 예산 추이 >



자료 : 통계청.



자료 : 기획재정부.

- **국가·기업 안전 시스템 강화** : 정부가 국가안전체계 개선을 주도하는 가운데 기업들도 안전 관련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
 - 정부는 2017년 공공질서·안전 분야에 전년 대비 2.9% 증가한 18.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한편,
 - 안전체계 개선을 위해 ‘국가 안전기준’의 통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련 법제도를 더욱 강화할 전망
 - * 일례로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 참사(16.10)를 계기로 버스 내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는 여객법 하위법령이 2017년 1분기부터 시행 예정
 - 정부 정책에 맞춰 기업들도 시설 및 장비 개·보수, 안전시스템 구축·운영 등 안전 관련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

- **안전산업 성장 및 지원 확대** : 안전산업의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
 - 국내 안전산업은 2011년 50억 달러에서 2021년 106억 달러로 성장 전망
 - 이에 정부는 안전산업 육성·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안전산업 분류체계를 도입하고 안전기술에의 투자 확대, 안전투자 기업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

- **안전 관련 제품·서비스 시장 확대** : 국민·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안전 제품·서비스가 증가할 전망
 - 재난·재해 경보, 제품 유해성분 알리미 등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 * 예를 들어 현재 유아용품, 화장품 등 일부 생활용품 부문에서 유해성분 포함 여부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소비자용품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음
 - 또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 안전을 지켜주는 제품·서비스가 확산될 전망
 - 나아가 제조부터 사용, 폐기단계까지 제품·서비스 수명 전 단계에서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도록 기업 생산 프로세스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시사점) 정부는 안전 R&D 확대 및 인프라 정비로 국가안전체계의 선진화를 주도하는 한편, 기업은 국민·소비자 안전 보호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안전 관련 투자 확대에 나서야 함

전해영 연구위원(hjeon@hri.co.kr 2072-6241)

⑦ 매니지먼트 시프트 : 'm'(제조)에서 'c'(소비)로

- (의미) 주력사업의 수익성, 지속성 제고를 위해 'm'(make; 제조판매)보다 'c'(consumption; 소비) 영역에 맞춘 서비스 개발 활동을 더욱 강화할 전망
 - 개념 : 제품 개발 및 판매에 주력했던 제조업 가치사슬을 서비스까지 확장하여 주력사업의 수익원(profit pool)을 확장하는 추세가 심화
 - 제조업체는 제품 판매와 활용도를 제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성을 확보하면서 아울러 주력 제품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
 - 더욱이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으로 인해 실시간 연결성을 지닌 제품에 기반한 고도화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서비스 중시 경향이 뚜렷
 - 배경 : 활용도를 중시하는 시장 니즈와 함께 ICT 혁신으로 제품 판매후에도 실시간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고수익의 서비스 영역으로 진출을 강화
 - 모든 사물이 연결된 IoT화 확산에 따라 제품 판매 후에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빅데이터, AI(인공지능) 등으로 새로운 서비스 개발 기회가 마련
 - 소비자도 제품구매보다 서비스 이용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제조업체는 경쟁 치열로 저수익화하는 제조보다 고수익의 서비스 영역으로 초점을 이동
- (내용) 전통적인 '제조 중심'(product-centric) 모델에서 벗어나 '서비스 중심 제조 모델'로의 변신이 확산되는 추세
 - 솔루션 개발 활성화 : 고객의 제품 구매와 활용 니즈를 동시 충족시킬 목적으로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를 패키지화한 솔루션(solution) 개발을 더욱 활성화

< 제조업의 서비스 부문 강화 동향 >

업종	주요 내용	사례
엔진	· IoT화한 산업설비의 가동 관리 및 예방 서비스를 제공 · 종합 설비 관리 및 서비스 향상용 플랫폼(platform) 개발	GE, 롤스로이스
자동차	· 커넥티드 카, 스마트 카에 기반한 서비스 개발 증가 · 신차 판매 '메이커'에서 차량 케어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이동 서비스 공급업체'로 변신	GM, 포드, 도요타
중장비	· IoT 기술로 연결된 중장비 상태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 드론, 클라우드기술 이용해 측량, 무인 공사 서비스 제공	캐터필러, 고마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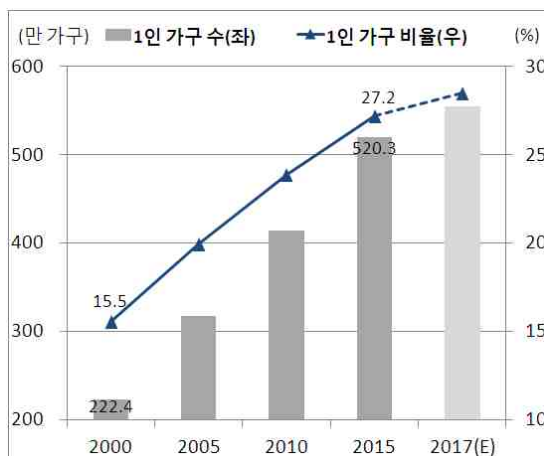
- IoT화한 기능을 갖춘 제품 개발과 함께 실시간으로 이용 상황 및 제품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니즈를 충족하는 솔루션 개발에 역량을 집중
- 제4차 산업혁명 대응 : 빅데이터, AI 등 ICT 발전으로 서비스를 더욱 중시하는 '서비스 중심 제조 모델'로 변신하는 경우가 점증할 것으로 예상
 - IoT화된 솔루션 제공으로 유형 제품의 판매 수입에다가 이와 관련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수료 수입을 추가해 수익성과 시장 지배력을 강화
 - 나아가 빅데이터, AI(인공지능) 기술 혁신에 따라 더욱 고도화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능해지면서 '서비스 중심 제조 모델'로 변신
 - 해외 업체 중 GE는 제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산업 기업'(Digital Industrial Company)으로 전환하는 비전을 설정
 - GM, 포드 등 자동차 메이커는 신차 판매보다 운행 관련 각종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 서비스 공급업체(mobility service provider)'로 변신 추진
 - 고마쓰(건설중장비 업체)는 드론, 클라우드컴퓨팅, 무인운행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컨스트럭션(smart construction) 서비스를 제공
- 주도권 다툼 치열 : 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되는 표준화와 플랫폼을 주도하기 위한 동종·이종 업체간 제휴, M&A 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
 - 제조업체와 통신사 제휴, IoT화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M&A, 국내외 업체간의 제휴 및 표준화 활동이 활발히 진행중
 -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제조 등 산업분야의 IoT 구축 표준화 마련을 목적으로 GE, IBM, 인텔, AT&T, 시스코 등 다양한 업종의 업체가 참여한 컨소시엄(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등 산업계 제휴 프로그램이 운영중
 - 자동차 업계에서는 포드-아마존의 스마트카와 스마트홈 연동 기술 개발, 도요타-마이크로소프트의 운전자 맞춤형 서비스 개발 등 제휴가 추진
- (시사점) 제조업의 서비스 영역 확대를 통한 수익성 제고에 경영 집중
 - 서비스 중심 제조 모델로의 이행 추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주력 사업의 저수익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제품 공급 업체로 위상 전락이 예상
 -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ICT 등 기술 확보와 마케팅 모델 개발에 경영 집중

이장균 수석연구위원(johnlee@hri.co.kr 2072-6231)

⑧ 불황형 소비(CORE)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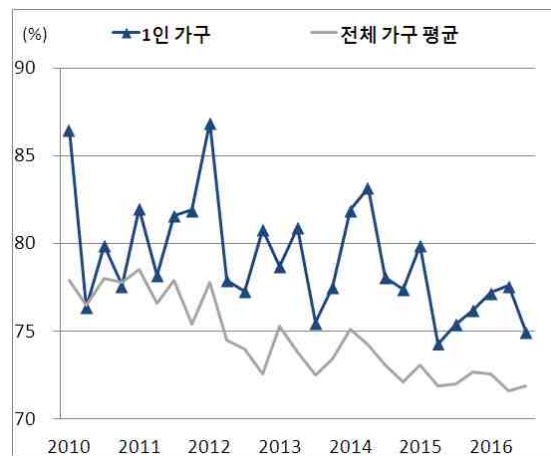
- (의미) 저성장 지속 및 소득성장 정체로 인해 비용 절약과 만족의 최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불황형 소비행태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
 - 불황형 소비란 제한된 구매력으로 만족을 추구하여 제품 본연의 가치에 집중하는 소비를 의미하며 향후 이러한 소비행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저성장으로 가구의 소비여력이 축소되는 한편 삶의 질을 중시하는 문화가 정착되면서 지출 절약과 만족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비행태가 확산될 전망
- (내용) 2017년 불황형 소비의 특징은 CORE이며, 이는 소형화(Compact), 소비자간 협동(Organized), 지출 감축(Reducing), 경제성(Economical)의 특징을 의미하고 2017년에는 이러한 특징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 **Compact, 소형화** : 1인 가구, 소규모 가구 비중 확대로 소형 제품에 대한 선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 2015년에 전체 가구 중 27.2%를 차지한 1인 가구 비중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평균 소비성향이 높아 향후 소비의 주축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식료품, 생활용품, 가전 등 주요 소비 시장에서 소형, 소포장 및 1인용 제품의 수요 증가가 예상됨

< 1인 가구 추이 >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17년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 1인 가구 평균 소비성향 >



자료 : 통계청.

- **Organized, 소비자간 협동** : 소비자간 협동 강화로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정보공유가 강화될 전망
 - 옥시 사고, 갤럭시 노트7 폭발 등 제조품에 의한 안전 사고 발생으로 소비자 권익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었으며 소비자의 단체 행동이 강화될 전망이다
 -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소비자간에 가격, 사용 후기 등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고 있으며 향후 소비자간 정보공유가 강화되고 구매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Reducing, 지출 감축** : 소득 성장이 지연되면서 소비지출을 감축하기 위한 소비행태가 확산될 전망
 - 저가형 제품에 대한 선호가 강화되고 공동구매, 소셜커머스 등을 통한 지출 감축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 해외직구가 많아지면서 해외직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해외직구가 국내 소비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Economical, 경제성** :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의 핵심적 가치 이외의 요소에 대한 고려를 최소화하고 경제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될 전망
 - 가전제품, 유아용품 등의 렌탈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B급 상품¹⁰⁾이 활발히 유통되는 등 소유가치, 상품가치보다 사용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자동차(그린카, 쏘카), 주택(에어비엔비) 등의 공유경제 활성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소비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소비활성화 대책과 변화하는 소비행태에 맞춘 마케팅전략이 필요
 - 정부는 가계부채 연착륙, 공공요금 및 주거비 인하 등을 통해 가구의 소비여력을 확충시키는데 주력해야 함
 - 기업은 상품의 실용성을 제고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변화하는 소비행태에 맞춘 판매 전략을 강화해야 함

김수형 연구원(soohyung@hri.co.kr 2072-6217)

10)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반품되었거나 약간의 손상이 있는 상품 등 상품가치가 떨어지지만 저렴한 제품.

⑨ 에듀 버블

○ (의미) 과도한 교육투자가 지속되는 반면, 경제는 저성장 국면에 머무르면서 에듀 버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

- 에듀 버블은 우리 사회가 높은 교육열 등으로 인해 적정 교육투자를 초과하는 높은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현상을 의미

- 2017년 2%대의 저성장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수요부진, 노동시장에서 고학력인력의 공급과잉 지속, 대학정원 대비 학령인구 부족 등으로 과잉 교육투자가 사회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

○ (내용)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심화, 교육투자수익률의 하락, 그리고 고등교육 체계 개편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

- 노동시장 미스매치 심화 : 노동시장에서 대졸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경제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력이 약화되면서 대졸 이상의 실업자 증가가 예상

· 1990년 고등교육등록률은 남자 49.3%, 여자 23.5%였던 반면, 2013년에는 남자 107.8%, 여자 81.3%로 크게 증가하면서 교육투자도 급증함¹¹⁾

·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는 교육투자와 일자리 수준의 미스매치가 심화되어 2016년 3분기 기준 실업자 중 대졸 이상 비중은 44.6%를 기록하였고, 2017년에도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교육투자수익률 하락 : 교육투자가 증가하면서 교육투자에 대한 수익률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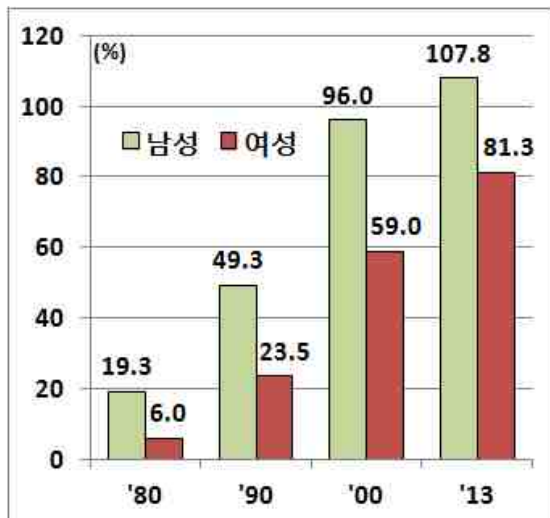
· Mincer 방식의 임금함수를 이용하여 교육투자수익률을 추정해보면 대학교육의 교육투자 수익률은 1990년 10.1%에서 2000년 7.5% 2015년에는 6.7% 수준으로 하락하는 모습임¹²⁾

11) 고등교육등록률(Gross enrolment ratio of tertiary(ISCED 5 and 6) education)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5년 이내 인구 대비 고등교육에 등록된 인구수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이후 5년이상 경과자의 고등교육 등록이 많을 경우 비율이 100%를 넘을 수 있음.

12)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를 이용하여 10인 이상 사업장의 24~34세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학교육에 1년 투자를 했을 때 얻는 임금프리미엄을 추정해 결과로 추정이 가능한 1980년 이후 단조감소하진 않지만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한편 여전히 높은 교육열·대학진학률과 노동시장에서 청년고용 문제가 더욱 심화되어 교육투자수익률 하락 추세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고등교육 개편 논의 본격화** : 2017년 이후에는 대학정원이 입학희망자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등교육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
 -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 대학 입학 희망자는 약 52만 734명인 반면 대학 입학 정원은 53만 655명~51만 2,036명이 될 것으로 예상됨¹³⁾
 - 이에 따라 교육부가 진행 중인 고등교육의 정원 감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고등교육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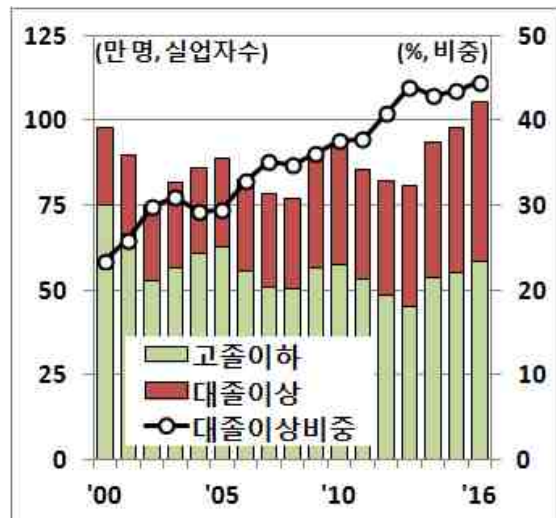
< 고등교육 등록률 >



자료 : World Bank.

주 : 고등교육등록률 = 대학이상등록인구수 / 고등학교 졸업 후 5년 이내 인구수.

< 학력별 실업자 수 >



자료 : 통계청.

- (시사점)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고등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절실
- 이를 위해서 사회 내 학벌주의 완화, 일 기반 학습 확산, 그리고 직업교육과 기초연구교육의 이원화 등의 노력이 필요

오준범 선임연구원(jboh19@hri.co.kr 2072-6247)

13)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추진 계획(2014년)', '대학구조개혁전략 및 방안(2013년)' 참조.

⑩ 빅 아이 스플 위(Big "I" Small "We") 사회

- (의미) 정치적 불확실성, 저성장, 소통창구 부재 등으로 인해 이기주의 심화(Big "I")와 공동체 의식 약화(Small "We") 현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2017년은 이기주의 심화(Big "I")와 공동체 의식 약화(Small "We")로 대변되는 사회적 갈등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¹⁴⁾
 - 정치적 불확실성, 저성장 지속, 소통창구 부재 등은 이기주의 현상과 사회적 갈등을 더욱 확대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내용) 특히 2017년은 세대와 노사, 공공정책을 중심으로 사회적 갈등 수준이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세대 간 갈등 심화 : 고용시장의 위축과 정권교체기의 불확실성 속에서 세대 간 갈등 문제가 고조될 것으로 전망
 - 높은 수준의 청년실업률과 중장년층의 불안정한 고용사정은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을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됨
 - 동일한 사회 현상에 대해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 인식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2017년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노사 갈등 확대 : 취약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속과 성과연봉제 실시로 인해 노사 갈등 문제가 확산될 전망
 - 정부는 현안기업 및 상시구조조정 정책¹⁵⁾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입장인데 추가 인력감축, 임금 삭감 등에 따른 노사 간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됨
 - 금융 노조의 경우에도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며 법정 다툼이 계속되고 있어 사측과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14)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마틴 셀리그만(Martin Seligman) 교수(1998년 9월 3일),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National Press Club Speech", Washington, D.C. USA. 연설 일부 인용. 미국 심리학회 조찬 연설에서 현대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동체 의식 약화 현상들은 구성원들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주장.

15) 관계부처 합동(2016년 12월). 「2016년 기업구조조정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특히, 노사 간 갈등은 국민들이 가장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임
- 공공정책 갈등 문제 내재 : 국방 및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쟁점들이 사회적 갈등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
 - 사드(THAAD) 방어체계 배치를 2017년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고, 지역 보상책 마련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갈등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집단 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발현될 것으로 예상됨

< 사회적 갈등 인식 조사¹⁶⁾ >

구분	경영자 v.s.노동자	고소득 v.s.저소득	정규직 v.s.비정규직	진보 v.s.보수	청년세대 v.s.기성세대	중앙정부 v.s.환경단체
2014년	84.6%	88.9%	82.9%	87.4%	64.1%	61.4%
2015년	85.7%	86.0%	85.2%	86.4%	64.0%	57.2%
2016년	86.6%	85.5%	84.8%	81.4%	68.9%	56.7%

자료 :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주 1) %값은 해당 항목의 설문조사 응답률을 나타냄.

2) 예를 들어 2016년의 '경영자 v.s. 노동자' 란에 있는 86.6%는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6.6%임을 의미함.

- (시사점) 사회적 갈등 문제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사회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사회적 갈등의 효과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해 실효성 있는 법·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절실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협의하려는 문화 조성이 필요함
 - 특히 공공정책 추진시 선호·비선호 사업을 묶어 정책 패키지화함으로써 갈등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박용정 연구원(yongjung@hri.co.kr 2072-6204)

16)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2016년 7월), 「2016년 한국인의 공공갈등 인식조사」.